

2월의 <가축대란>의 인공성은 <바이오 침략>으로 인식 되어서 국내안보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바이오 침략의 실체는 2세대와 3세대 불명확하지만 2세대는 이미 대량생산의 핵공격을 능가할 정도로 위협적이며 3세대는 (한국일보 2001.2.13) 라고 있다.

가축대란 육식문화가 불러드린 재앙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유럽세계의 광우병,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우리나라의 식약청이 처음으로 조사한 곡류, 육류, 생선 등의 다이옥신 잔류농도 발표 등은 우리들의 식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식탁테러> 또는 <바이오 침략>으로까지 인식하게 된 최근의 <가축대란>이 국가안보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강대국들이 <식량안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다. 바이오침략의 실체는 물론 개념조차 불명확하지만 그 파급속도와 피해규모가 핵공격을 능가할 정도로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01.2.13)라고 하고 있다.

이 논지에 의하면 얼굴없는 적이라고 하는 바이오침략자가 마치 이 세상 어디에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예측에 의하면 가축대란은 현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육식문화가 불러드린 재앙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늘의 가축대란의 원인을 공장형 축산으로서 대규모, 저비용 그리고 생육 촉진방법을 쓰고 있는데서 찾고 있다. 문제는 대량생산에 있으면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사람들의 소비욕구이다.

구미국가에서 비롯된 육식문화가 인류문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는 가축대란으로 인한 공포가 오늘처럼 크게 부각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터였다. 식량경제학자인 프란시 무어는 곡식을 먹여 키운 고기중심의 식생활체계는 자원(물, 곡식, 에너지 등)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경(열대우림, 지구온난화 등)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쇠고기의 대량소비로 지구환경, 세계경제와 식량문제 그리고 인간의 건강문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주지의 사실이다.

'92년도에 출판된 <탈쇠고기문화>의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여기에 대해서 쇠고기문화의 윤리성을 따진다. 곡물이 사료(1kg 쇠고기생산에 7kg의 곡물 소요)인가, 식량인가라는 문제가 앞으로 세계의 중대한 정치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쇠고기문화가 세계인구의 5명중 1명이 영양부족과 만성적인 기아로 굶주리게 하는가 하면 육식위주의 선진국 국민들은 심장병, 뇌졸중, 간질환 등으로 죽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탈쇠고기 문화>는 쇠고기를 통해서 근대문명을 비판한 것으로서 60년대의 농약의 폐해를 파헤쳐 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겨준바 있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필적할 만한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우병의 위협으로 이미 유럽인들의 식습관에 변화가 일고 있는 채식주의자가 증가하고

한 생산양식이

식품산업은 '유기농'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식물성식품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이들도 대량생산과정을 거치면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이나 농약에 찌들은 식품 등에 대한 논란이 그 증거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성장속도조작이나 생산량조작이 화멸을 향해 가는 이정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인위적인 무리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에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없으니 안심하고 먹으라느니, 한우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느니 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쇠고기 판촉에 나서는 것은 축산농가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으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쓰시협>이 광우병 등의 가축대란의 사태를 단지 음식물찌꺼기재활용과 관련시킨 잘못된 사료문제를 받아드려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광우병 예방차원의 음식물찌꺼기의 올바른 재활용문제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한 먹거리 자급책, 생산방식의 전환책, 건강한 식생활문화 확산책 마련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국민의 건강도 지키는 일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가축대란의 재앙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광우병 등이 가축대란의 사태를 잘못된 사료문제로만 받아드려서는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전한 먹거리 자급책, 생산방식의 전환책, 건강한 식생활문화 확산책 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한다.